전남 지자체 7개 현안사업 '속도'

목포 청년 스타트업센터·여수 시립박물관 등 중앙투자심사 통과
총 9개 사업 중 2개 탈락…담양 군민생활체육센터, 재검토 판단

여수시립박물관 조성사업과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등 전남지역 기초지자체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실시한 '2023년 제 2차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여수시 등 5개 시·군이 올린 9개 사업 중 2개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을 통과시켰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300억(시·군 200억) 이상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다.

이번 심사 대상 사업은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목포·306억)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여수·293억) ▲선소테마정원 조성(여수·239억)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여수·208억) ▲생물전환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순천·323억)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순천·310억)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보성·302억) ▲담양 군민생활체육센터 조성사업(담양·413억) ▲남해권역 보성벌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보성·356억) 등이다.

행안부는 이들 사업 중 담양 군민생활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수요를 토대로 운영수지를 분석한 뒤 재상정하라며 '재검토' 판단을 내렸고, 보성벌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사업은 국비 지원계획을 확정한 뒤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라며 '반려'했다. 나머지 사업들의 경우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수시립박물관 사업은 지난해 '반려' 판단을 받았다가 이번엔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 접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인력운영계획 마련 등을 조건으로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수시립박물관은 3만3000㎡ 부지에 293억원을 들여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진다. 선소테마정원도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목포시가 지상 5층(연면적 1만894㎡) 규모로 추진하려던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도 실시설계 뒤 총사업비 등이 결정되면 2단계 심사를 거쳐 사업이 본격화되고, 순천시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지하 2층·지상 5층)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단계 심사를 통해 착공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공무원들 수확철 일손돕기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직원들이 14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구례군 광의면과 용방면의 취약농가를 찾아 매실수확을 돕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광주~영암 아우토반 적극 추진"

영암서 도민과의 대화…郡, 야간경관 조명사업 지원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영암군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주~영암 아우토반(초고속도로)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영암군 영암군민회관에서 열린 '영암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주~영암 아우토반이 건설되면 서남권 관광의 판이 바뀐다"며 "전남도와 영암군이 긴밀히 협력해 아우토반 건설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우승희 영암군수와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 신승철·손남일 전남도의원, 김종득 영암경찰서장, 윤강열 영암소방서장, 전남도 실국장, 영암군민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우승희 군수는 이날 영암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영암·삼호읍권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도비 1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영암군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읍 소재지의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올해는 이미 관련 사업이 마무리 됐다"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참여한 영암군민들도 이날 대불인조잔디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와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불국가산단 보조사업 도비 부담 비율 상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전 시군의 노후 산단을 지원하려고 하니 도-시군의 예산 매칭 비율을 3대7로 하고 있다"며 "도비 부담 비율을 70%까지 올리긴 힘드나, 군 재정을 감안해 도 부담을 40~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군공항 이전본부' 신설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

민선 8기 광주시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군공항이전본부가 신설되고 1과가 줄어 기존 14실·국·본부 73과에서 15실·국·본부 72과로 변경된다. 1년 한시 임기이긴 하지만, 군공항이전본부장(3급) 직위가 추가되면서 총 정원도 1명 늘어난 4197명이 된다.

인공지능산업국을 인공지능산업실로 격상해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차·에너지·로봇·가전·의료 등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경제창업실 소속이던 투자산단과도 인공지능산업실로 이전한다. 경제창업실은 경제창업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창업지원과 상생 일자리 확산 업무에 집중한다. 여성가족교육국은 여성가족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인재육성과를 교육정책관으로 확대했다.

시는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돌봄정책과로 명칭을 바꾸고 전담팀도 신설한다.

직속기관에서는 119특수대응단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사업소에서는 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이 신설된다. 시의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개정안 중 민주인권평화국 사무 분장과 관련해 민주·인권·평화도시 전략 수립 업무를 가장 우선 순위로 변경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 명칭도 5·18민주화운동으로 통일했다. 노동정책관도 문화경제부시장실 직속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수정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中 장춘·다롄 지역 판로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농수산식품 등 1667만 달러 수출 협약

전남도가 도내 수출기업의 중국 시장진출 확대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최근 6일간 중국 동북지역 장춘과 다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667만 달러의 수출협약과 222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 이후 약 3년 만에 추진한 중국 동북지역 시장개척단엔 농수산식품 7개 기업과 비료 등 공산품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시장개척단 참여 11개 기업은 62개 현지 구매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나름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로 장춘에선 39개 구매자가 참여해 총 110건의 수출입 상담을 하는 등 전남 농수산식품과 공산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호성'의 아로니아 제품, '아라움'의 스낵류, '완도물산'과 '완도맘'이 김 및 해조류 등에서 189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다롄세계박람광장에서 개최된 제36회 다롄수출입상품박람회에도 참여해 전남의 제품을 알리고 현장에서 구매자들과 수출상담을 가졌다. 특히 중국 구매자의 밀키트 제품에 관심이 많아 '삼면이 바다'의 밀키트 및 해조류를 활용한 페스토 제품이 인기를 끌어 약 1667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맺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경제활동 재개로 긍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시장개척단 파견과 박람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7월 중 중화권 구매자를 초청해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광주교육청, 비위 교원 징계 대신 승진 파행"

박수기 시의원 지적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민주·광산5)은 14일 "사립학교에서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징계 대신 승진을 시킨 광주교육청은 인사 파행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1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징계 요구를 받았던 전력으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들에 대해 지난 2월 교장자격을 승인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 교원은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한 일과 관계돼 징계를 요구받았고, 다른 한명은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았던 핵심 관계자였다"며 "이들이 교장으로 승진된다면 정상적인 사립학교 관리 감독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서도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장학관 특별채용 의혹 등으로 교원단체들의 공익 청구 감사도 잇따랐다"며 "취임 1년간 인사 파행이 거듭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학교가 오랫동안 교장이 공석이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장 자격을 승인했다"며 "교원양성위원회는 합의제 위원회로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